[해외칼럼] 日·北 협상과 韓·日 협정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덕에, 일본은 북한 문제에 관한 주요 행위자로서의 위치를 굳혔다.
따라서 일본이 북한과의 수교 회담에서 취하는 조치들은 안보 문제에 관한 미국의 관심사와 직결되며, 그 역(逆)도 마찬가지다. 미·일 간 정책 협조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미·일 정책 협조 대상에는 일·북 수교 협상의 성격 문제도 있다. 아직 일·북 수교 회담이 성공적 결과를 낳기엔 까마득해 보이지만, 장차 미·일 사이에 토론 주제가 될 만한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해에 수반될 돈의 문제다.

일본 관료들은 장차 체결될 일·북 협정이 1965년의 한·일 협정을 바탕으로 할 거라고 말한다. 65년 한·일 협정에는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총 100억달러쯤에 해당하는 원조와 장기 저리 차관(당시 화폐로 정부 원조 2억달러, 상업차관 3억달러)이 수반됐다.

하지만 한·일 협정이 오늘날 일·북 협정의 바탕이 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한·일 협정은 냉전이 절정에 달했을 당시 동북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을 연결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일본은 한반도 공산화를 막기 위한 보루(堡壘)로서 한국의 취약한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경제 원조를 제공했다. 이 특별한 공식은 비밀 협상과 오히라 마사요시와 김종필 사이의 친밀한 개인적 관계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한·일 간엔 역사적 반감이 남아 있고 때때로 해상 갈등도 빚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일본 국민을 납치한 적도, 일본에 직접적인 군사 위협을 가한 적도 없었다.

일·북 협정은 전혀 다른 상황에서 이뤄지게 될 것이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노동 미사일 배치로 일본에 직접적인 군사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을 일본을 향해 최소 두 번(1993년엔 노동 미사일, 1998년엔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했다.

그들은 일본 민간인들을 납치했고, 감금한 동안 죽게 내버려 두었다. 1970년대 이래 110억달러나 되는 대일(對日) 채무도 불이행 상태로 남아 있다.

즉 1965년 한·일 협정에 수반된 자금은 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두 주요 동맹국의 관계에 얽힌 더 큰 지리전략적 맥락과 결정적으로 연결돼 있었지만, 오늘날 북한과의 협정은 동맹국과 맺는 게 아니라, 자국 안보를 직접 위협하고 주권을 침범하는 나라이자 이미 100억달러를 일본에 빚진 나라와 맺는 것이다.

일본 관료들은 남북한에 같은 형식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의무감 때문에 65년 한·일 협정이 참고할 만하다고 정당화할지도 모른다.

만일 그게 이론적 근거라고 하더라도, 북한에 줄 금액은 한국에 주었던 1965년 화폐 기준 5억달러를 지금 가치로 환산한 것일 수는 없으며, 그때 화폐로 4500만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야 할 것이다.

이는 1965년 한·일 협정에서 일본이 한국에 식민 지배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향후 10년간 지급키로 했던 금액이다(이것 외에 일본 상품과 용역으로 구성된 3억달러어치의 추가 지원이 있었다).

일본과 한국, 일본과 북한을 둘러싼 상황은 서로 독자적이다. 일본은 그에 따라 양국을 대우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관료주의적으로는 편하겠지만 일본 국익에는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 빅터 차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정치학)

<출처 : 조선일보 해외칼럼 2004. 9. 3>